

표지면지

2018년도 안보정세전망

국방대학교

발간사

2017년은 불확실성을 넘어선 초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이 당연하게 느껴질 만큼 각국의 전략과 이해가 격렬하게 충돌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강력한 리더십을 앞세운 주변 4국의 전략적 움직임은 그야말로 팽팽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지향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에 한층 박차를 가하며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공세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화민족 부흥, 중국몽(中國夢)의 완수’를 추구하는 시진핑 주석은 집권 2기의 외교전략을 ‘신시대 중국 특색 외교’로 정의하고 주변국과 적극적 외교 관계를 추진하며 미국과의 갈등과 경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아베 총리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 하에 강력한 미일동맹과 정상국가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 및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으며, ‘강한 러시아’의 재건을 지향하는 푸틴 대통령은 미·중 간의 갈등, 미국의 고립주의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영향력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대국 정치의 세계적, 지역적 충돌과 갈등을 한반도로 전이시키고 있는 핵심 매개가 북핵문제라는 점은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을 듯합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통한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여러 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과 <화성-15> 형 시험발사를 통해 이제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강대국 정치의 거대한 충돌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의 안보를 그야말로 초-초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의 기초 하에 도전요인을 억제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가오는 신년을 한반도 정세안정과 발전을 위한 전환의 해로 만들어갈 지혜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도 안보정세전망과 대비방향을 간략한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간물이 한국안보와 국방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소장 김영호

본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를 종합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2018년 안보정세전망

제1장

세계정세전망

| | |
|---------|----|
| 1. 정치 | 2 |
| 2. 군사 | 6 |
| 3. 경제 | 10 |
| 4. 사회문화 | 12 |

제2장

동북아정세전망

| | |
|---------------|----|
| 1. 정세개관 | 16 |
| 2. 미국의 동북아정책 | 18 |
| 3. 중국의 동북아정책 | 21 |
| 4. 일본의 동북아정책 | 24 |
| 5. 러시아의 동북아정책 | 27 |

제3장

북한정세전망

| | |
|----------|----|
| 1. 정치 | 30 |
| 2. 군사 | 35 |
| 3. 경제 | 38 |
| 4. 대외·대남 | 41 |

목차

2018년 안보정세전망

제4장

국내정세전망

1. 정치····· 44
2. 군사····· 46
3. 경제····· 48

제5장

안보정세종합평가

1. 세계정세····· 52
2. 동북아정세····· 54
3. 북한정세····· 57
4. 국내정세····· 59

제6장

결론 및 대비방향

1. 대외정책····· 62
2. 대북정책····· 66
3. 국내정책····· 68

제1장

세계정세전망

1. 정치: 미국의 리더십 표류와 국제질서의 불안정성 가속화
2. 군사: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과 군사적 갈등 증가
3. 경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통상마찰 심화
4. 사회문화

제1장 세계정세전망

1 정치: 미국의 리더십 표류와 국제질서의 불안정성 가속화

○ 초불확실성 시대의 가속화

- ‘힘을 통한 평화’를 지향하는 트럼프는 국방력 강화를 바탕으로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공세적으로 추구
- ‘중국의 초강대국 부상’을 추구하는 시진핑은 집권 2기의 외교전략을 ‘신시대 중국 특색 외교’로 정의하고 주변국과 적극적 외교 관계 추진
-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아베는 북한의 핵 위협 및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국민적 안보불안감에 편승하여 일본의 재무장 추진 가속화 예상
- ‘강한 러시아’의 재건을 지향하는 푸틴은 2018년 3월 대선에서 4선 성공함으로써 2024년까지 장기집권 체제 확립

○ 향후 아시아 역내의 불확실성 증대

- 미국의 국제 기구 및 제도 탈퇴, 신(新) 중상주의적 경제정책, 일관성 없는 외교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미국의 역내 리더십 약화
-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역내 국가들에 대한 미국 리더십의 상대적 약화를 공략하기 위해 외교·경제 등의 소프트파워 자원 활용 강화
- 또한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 국가들 간의 간극을 계속 공략하는 현상변경적 외교, 군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질서의 불안정성 가속화

○ 미국의 국내정치 불확실성 증대

- 2018년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트럼프의 국내 정치 영향력 정도에 중대한 영향
- 2017년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이 총 100석 중 52석으로 과반수 점유 (민주당 46, 무소속 2). 하원의 경우, 총 435석 중 공화당이 240석으로 다수당 유지 (민주당 194석, 공석 1석)
-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서 다수당 지위를 얻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현상 발생할 가능

○ 미국의 리더십 표류와 국익 중심의 외교 행보 가속화

- 2017년 국제 사회는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공식탈퇴 선언, 파리기후변화협정과 유네스코 탈퇴로 인해 충격에 빠짐
- 특히 TPP는 오바마 행정부 2기에 추진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경제적 중추라는 점에서 미국의 TPP 탈퇴 선언은 아시아 역내 미국의 리더십 약화 및 중국의 역내 영향력 증대 초래
- 또한 미국의 TPP, 파리기후변화협정 등 탈퇴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 부재로 해석됨에 따라 일본, 베트남 등의 국가들은 미국의 공약 약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재평가

○ 미국의 범지구적 리더십 약화 그리고 중국의 리더십 확립 전략

- 중국은 미국의 범지구적 리더십 약화가 주는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외교전략 추진
 - 시진핑 주석은 제19차 당 대회에서 '인류 운명공동체'를 강조하면서 미국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크게 대비되는 범지

구적 리더십 제시

-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공식 발표 이후 중국은 EU 등 대부분의 협정 당사국들과 함께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
- 향후 중국은 ‘분발유위’의 기치하에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와 동시에 자국의 국익 확보를 강화하는 외교 행보 추진
- 자국 이익 확보를 목표로 한 중국의 범지구적 리더십 확보 노력이 파리기후협약,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EC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NDB), 응급저비기금(CRA) 등에서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 향후 범지구적 무역 및 금융,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가속화

○ 미국과 나토 중심국가인 독일·프랑스 간의 갈등 증가

- 트럼프는 독일의 이민정책, 나토 분담금 문제, 자유무역 체제 등을 놓고 메르켈과 갈등 표출
- 향후 나토의 미래를 둘러싼 미국과 독일 간 이견과 같이 지속 전망

○ 중동 내 반이란 동맹의 부상을 둘러싼 중동질서 불안정성 증가

- 중동 내 수니파와 시아파 국가 간의 대결구도 가시화
-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에 대항하기 위한 반이란 동맹을 구축 중.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숙적인 이스라엘까지 포함한 ‘대이란 공동전선’ 구축 시도 중
- 2017년 10월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불인정 선언으로 인해 고조되고 있는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구도 또한 ‘대

이란 공동전선'의 한축을 차지

- 60일 안에 결정하게 될 미 의회의 대이란 제재 여부와 내용이 향후 중동 정세 변화의 중대한 변수령

2 군사: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과 군사적 갈등 증가

○ 미국의 국방비 증액 추세 지속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 정책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
-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국방비 증액 추세 지속 추진
 - 트럼프 대통령은 2018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 편성안에 6,391억 달러의 국방예산 요청
 - 이는 2017 회계연도에 의회로부터 승인된 국방예산 6,060억 달러와 비교 시 331억 달러가 증액된 금액으로 5.5퍼센트의 증가율
 - 미 의회는 2017년 11월 7,000억 달러의 국방수권법 (NDAA)을 통과 시킴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국방비의 약 10%를 추가 증액
- 2018년 11월 중간선거까지 백악관과 미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유지됨에 따라 적어도 2019 회계연도까지 미국의 국방비는 계속 증가 전망
- 미국의 국방비 증액에 따라 핵전력 현대화 및 범지구적 군사력 현시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

○ 미국의 재균형 정책 2.0 :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에서 트럼프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정책과 차별화 시도

-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1) TPP를 중심으로 한 경제 (2) 동아시아 정상회의, APEC 등을 중심으로 한 외교 (3) 한·미·일·호·싱가포르·베트남 등의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 강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재균형 정책 추진
- 트럼프 행정부는 TPP 탈퇴 선언, 동아시아 정상회의 불참 등 아시아 역내의 정치·경제 다자주의 기구에서 부분적 후퇴
-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주로 군사적 차원으로 전개될 것이며, 특히 중국 견제를 목표로 인도 그리고 일본·호주를 연계하는 군사훈련 빈도 강도 증가 예상
- 또한 미국은 한·미·일 3각 연대의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인도·일본·호주·한국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시도 전망

○ 러시아·북한 위협에 대한 나토의 국방태세 재정비

- 2014년 러시아에 의해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나토는 국방력 전면 재검토
- 향후에도 나토의 국방비 증가 및 국방태세 재정비에 대한 노력 지속 예상
 - 2015년 나토의 국방비는 전년도에서 1.5 퍼센트, 2016년 나토의 국방비는 전년도의 3.3 퍼센트 그리고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4.3% 증가
- 최근 나토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협조된 대응을 촉구
 - 2017년 11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전쟁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발전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

-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향후 북핵 문제를 나토장관회의 의제로 선정하여 논의해 나갈 것임을 밝힘. 또한, 북핵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위협에 대한 나토의 핵억지 능력과 의지를 촉구
- 향후 나토가 대응하고자 하는 주요 위협에 러시아와 북핵 문제가 지속적으로 상정될 전망

○ 주요 강대국의 핵전력 현대화를 둘러싼 갈등 고조 예상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가속화
 - 러시아는 2016년 칼리닌그라드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지대지 미사일을 실전배치 하였으며, 2020년까지 이 미사일을 전 육군에 배치 계획 발표
 - 러시아는 또한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실시된 자파드-2017 훈련, 발트해에서 중국과 실시한 최초의 연합해상훈련 등을 실시
-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의 공세적 대응에 대해 군비증강과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나토-러시아 간 갈등 점차 증가
-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핵정책 변화 가능성
 - 미국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배치에 대해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생산과 배치를 금지하기로 한 1987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위반이라고 비난
 - 향후 미국이 곧 발표될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노후화한 기존의 핵탄두와 발사체를 대체할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정책을 변경할 경우 향후 미러 간 핵전력 증강을 둘러싼 갈등 증가 불가피

○ 사이버 억제에의 도전 가속화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제5의 작전 공간으로 부상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억제태세에 대한 도전 강화
- 사이버 공간에서의 억제는 기존의 핵 및 재래식 억제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공감대 확산
- 사이버 억제 개념 발전의 필요성 증대
 - 사이버 공간에서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 앞으로 적의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매김할 전망
 - 특히 현대 미디어를 이용하여 사이버 억제를 위한 의사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증가 예상

3 경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통상마찰 심화

○ 미국의 신(新) 중상주의와 통상압력 강화

-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와 한미 FTA에 대한 폐기 위협을 가하면서 재협상 유도
-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 무역을 중심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가치와 원칙을 무시하고 미국만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미국 우선’ 정책 추진
- 정치·경제적 국수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新) 중상주의적 외교정책은 미국 국내 정치 영향으로 향후 지속 전망
 -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 미국 제조업의 중심인 소위 러스트 벨트 (Rust Belt)의 재부흥을 중심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중점
 -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을 통해 달러 약세를 유지하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아시아 역내 중국과 일본의 경제 주도권 경쟁 가속화

- 미국의 TPP 탈퇴로 유발된 역내 경제 리더십 공백에 대해 중국과 일본 간 경제주도권 쟁탈을 위한 경제 가속화
 - 일본은 미국 대신 TPP를 주도하고 11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뉴질랜드 등 11개 TPP 잔류국과의 협상을 통해 TPP를 ‘포괄적, 점진적 TPP’(CPTPP)로 개칭하여 지속 추진 합의
 - 중국은 미국의 TPP 탈퇴에 따른 리더십 공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의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

- 향후 아시아 역내 경제적 주도권의 균형추가 중국 중심의 RCEP 그리고 일본 중심의 CPTPP 사이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귀추 주목

○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와 유로화의 약세 가능성

- 향후 EU의 경제지표 호조와 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유로화 강세 유지 가능성 높음
- 그러나 향후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국과 EU 간 갈등 고조 시 유로화 약세 유발 가능
- 또한 오스트리아와 독일 총선에 따른 극우주의의 득세로 인해 EU 재정정책이 난항을 겪을 경우 유로화는 약세 전환 가능

○ 범지구적 경제의 단기적 회복 그러나 장기적 도전 가속화

- 국제통화기금 (IMF)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 자원 수출국 성장세 가속화로 범지구적 경제 성장률을 2017년 3.6%, 2018년 3.7%로 전망
- 그러나 경제 성장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 담보, 소득 불균형, 그리고 저소득층의 실업률 증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경제 성장률 저해 가능
- 또한 중동,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은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률 저해 초래

4 사회문화

○ 유럽 내 반난민, 반유럽통합 정서의 증가 가능성

- 독일 국내 정치의 격변과 여파 지속 전망
 - 2017년 9월 24일 독일 총선에서 난민 유입·유럽통합에 반대하는 포퓰리스트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Alternative for Germany)이 제3당으로 등극하는 정치적 대격변 발생
 - 각 정당의 이민정책, 기후변화, 유로존 개혁을 둘러싼 큰 견해 차이로 인해 독일 메르켈 총리는 9월 총선 이후 11월 말 현재까지 연정 구성에 난항
 - 메르켈 총리는 향후 소수정부를 구성하거나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 봉착하는 등 정치 리더십 발휘 제한
- 향후 반난민, 반유럽통합 목소리 증가에 따른 정책혼선 예상
 -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자 정치적 리더인 독일의 정치적 위기로 인해 향후 유럽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증가 예상
 - 또한 독일 내 극우 정당 부상은 오스트리아 총선 결과 제3당으로 자리매김한 자유당의 부상, 폴란드에서의 대규모 극우주의 시위 등과 함께 유럽 내 반지구화와 국수주의 증가 지표로 해석
 - 특히 향후 유로존 개혁, 러시아에 대한 EU 정책 및 제재, 난민 정책 등 산적한 안보·경제 현안 해결에 적신호

○ 선진국 내 '소프트 타깃 테러'와 '로우 테크 테러' 증가

- 2017년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소프트 타깃 테러(soft target terror)'

사망자 사상 최고치

- 호주의 국제싱크탱크인 경제평화연구소 (IEP)가 발표한 ‘세계테러리
증지수 2017’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선진국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
한 사망자는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 테러 공격이 군인에서 민간인 상대로 이동하는 ‘소프트 타깃 테러’의
확산 추세 지속 전망
- 선진국에서 ‘로우 테크 테러 (low tech terror)’ 또한 증가 추세
 - 최근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공격 수단으로 삼는 이른바 ‘로우
테크 테러’가 증가하고 있음. 대테러 당국이 테러를 예방하는데 한계
가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과 공포심 유발
 - 특히, 스페인 바르셀로나 (13명 사망, 100여명 부상), 영국 런던 인근
(6명 사망, 20여 명 부상), 미국 버지니아 (3명 사망, 3명 부상) 등
유명 관광지, 인파가 몰리는 거리 등에서 차량을 군중에 돌진함으로
써 발생하는 테러 증가
 - 다중 시설과 관광지 등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에 대한 치안 대
책, 차량테러 방지 장애물 설치, 응급대응체제 등 확립에 중점

○ 후기 진실 정치의 가속화

- “진실이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이 아닌 주장에 의존하는 정치를 의미하
는 후기 진실 정치 (post-truth politics) 양태 증가 추세
- 객관적 사실 보다 감정 자극 또는 개인적 믿음이 여론을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 증가
- 후기 진실 정치는 적대세력에 의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 조작, 테
러리즘·이민·경제 양극화 등으로 인한 불만과 공포감 때문에 향후 계
속 증폭 전망

○ 지진·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증가

• 대규모 지진의 빈도 증가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리히터 5.4 규모의 지진은 한국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
- 2017년 9월 8일 멕시코 남부에서 발생한 리히터 8.1 규모의 강진 발생하여 엄청난 피해 유발. 이를 포함 2017년 들어 리히터 7.0 규모 이상의 강진이 세 차례 발생
- 지진의 강도 그리고 이것이 동반한 인적·물적 피해의 증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 뿐만 아니라 지역적·글로벌 차원의 협력 체계 정비 요구

• 치명적 위력의 허리케인·태풍 빈도 증가 및 이로 인한 피해 증폭

- 미국 동남부를 연이어 강타한 2017년 8월 허리케인 하비(카테고리 4) 그리고 9월 허리케인 어마 (최상급인 카테고리 5)는 허리케인·태풍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줌
-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의 구심점 상실로 국가 간 공동연대 약화
- 허리케인·지진의 강도와 이로 인해 유발되는 인적·물적 피해의 증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 뿐만 아니라 지역적·글로벌 차원의 협력 체계 정비 요구 목소리 증대 예상

제2장

동북아정세전망

1. 정세개관: 국익중심의 경쟁과 협력의 공존 및 미중 경쟁의 각축장화
2. 미국의 동북아정책
3. 중국의 동북아정책
4. 일본의 동북아정책
5. 러시아의 동북아정책

제2장 동북아 정세전망

1 정세개관: 국익중심의 경쟁과 협력의 공존 및 미중 경쟁의 각축장화

- 미국이 조성하고 있는 세계적인 초불확실성 시대의 조류하에 역내 경쟁과 협력 구조의 복잡성 증폭
 - 미국은 세계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역내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적 정책기조하에 자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 추구 활동 강화
 - 강대국 중심의 동북아 안보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일과 중러를 중심으로 한 역내 신냉전적 대결구도 형성 가능성 점증 및 공동의 안보현안에 대한 협력적 해결의 난항 가증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메커니즘 수립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강대국 간 무역전쟁 발생 가능성 상존
 -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더불어 각국의 경제적 혁신경쟁 심화로 인해 국가별, 분야별로 경쟁과 협력의 중첩적 교차 발생 및 이에 따른 역내 질서의 복잡성과 불안정성 증대
- 동북아 지역의 미중 경쟁 구도 심화
 -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글로벌 강대국 도약 비전의 영향으로 동북아 지역차원의 미중 경쟁구도 심화
 - 미중 양국의 역내 경쟁구도 심화에 따른 미일동맹의 강화와 중러 협력 구도 강화
 -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지역적 차원의 미중 간 경쟁 심화가

글로벌 차원의 미중 경쟁구도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 불가

- 중국의 군사개혁에 따른 강군몽(強軍夢) 추구하고 미국의 국방비 증액 및 3차 상쇄전략으로 인해 역내 미중 간 군비증강 추세 고조

○ 미중 경쟁 구도 심화에 따른 역내 질서 재편 가능성 증대

-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추진 과정에서 양국 간 역내 질서 주도권 확보 경쟁 가속화와 이에 따른 역내 질서 재편 가능성 증대
- 미중 간 역내 경쟁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역내 중견국 및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양국의 영향력 확대 추구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의 병용을 통한 압박 증대
- 미일동맹 강화 및 보통국가화 추진 가속화를 바탕으로 일본의 역내 영향력 확대 추구하고 이에 따른 중일 간 경쟁구도 심화
- 대미 견제 및 신동방정책의 추진을 통한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확대 노력 증대

○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한 역내 안보불안 증대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완료의 시간적 임박성에 따른 긴박감 증대와 불안감 고조
-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모든 옵션(Full Range of Option) 고려 및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북한의 초강경 비난 및 협박성 대응으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불안정성 점증
-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제재와 대화에 대한 강대국 간 입장차이의 심화
-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 선포와 더불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 불가

2 미국의 동북아정책

○ 동북아정책 기조

-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공약 유지 및 공조를 기저에 두고 미국 우선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자국의 경제 및 안보적 이익 추구 강화
- ‘힘을 통한 평화’의 기조 하에 역내 동맹관계 중시정책의 지속적 유지와 더불어 불확실성에 기반을 둔 전략적 운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 극대화 추구
- 국방예산 증액과 제3차 상쇄전략을 통한 역내 군사력 우위 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도-태평양 구상의 구체화에 따른 역내 군비 증강 추진
- 역내 안보 및 군사적 측면의 불확실성 활용을 바탕으로 동맹국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 추구과정에서 미국의 역내 리더십 상대적 약화 가능성 상존
- 자국 우선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 압도적 군사력 지위 활용으로 인해 미국의 역내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경우 정책기조의 부분적 전환 가능성도 배제 불가
-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일방적 압박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중 견제는 강화
-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기조의 유지 하에,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포함한 ‘최대한의 압박’ 우위 정책 추진

○ 대중 정책

- 양국 간 상호의존으로 인한 협력의 지속과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중 압박 강화가 병존
 -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인도-태평양 구상의 구체화와 추진하에 역내 동맹관계 강화를 통한 대중 압박 강화
 -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 유지를 통해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 견제
 - 미중 간 무역 불균형 및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강화와 더불어 슈퍼 301조 발동, 환율조작국 지정, 등등과 같은 조치들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협상력 극대화 추구
 - 중국의 역내 안보 및 군사적 영향력 강화와 반접근/지역거부 전략(A2AD)에 대해 제3차 상쇄전략을 통한 군사적 대응능력 및 압박 강화
- 북핵 문제와 관련한 대중 압박 강화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수단 사용 가능성의 암시를 지속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추진
 - 중국에 대한 대북 압박 요구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 사용 가능성을 통한 대중 압박

○ 대일 정책

- 역내 동맹관계의 핵심인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해 지역질서에 대한 주도적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안보적 보장에 대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도 동시 추진
-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대중 견제의 지속적 확대
 -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구상의 구체화에 대한 협력 확대

- 미중관계의 역내 G2체제 발전을 포함한 불확실성 활용을 통해 일본의 적극적 미일동맹 강화 및 대미협력 유도

-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미일 공조체제 지속적 강화

○ 대러 정책

- 대선 당시 러시아 개입 의혹의 여파로 인해 미러 간 급격한 관계개선 추진은 제한적
-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에 따른 나토 및 서방의 대러견제 지속적 동참

○ 대한반도 정책

- 한국에 대한 동맹관계의 지속적 유지하에 미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을 도모하면서 대중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요구 증대
- 한미 간 무역 불균형 시정 요구 강화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 상존
-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의 지속적 추진 하에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군사적 수단 동원을 통해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북 압박 지속적 강화
 -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른 공개적 대화 재개 가능성도 상존
 - 군사적 수단 사용을 비롯한 압박과 대화의사를 비롯한 관여가 병존하는 불확실성 활용의 협상전략을 통해 북한 비핵화 노력 지속 추진

3 중국의 동북아정책

○ 동북아 정책기조

- ‘글로벌 초강대국 비전’과 ‘중화민족 부흥’의 지속적 강화 기조하에 역내 영향력 확대와 심화를 적극 추진
 - 19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글로벌 초강대국 부상의 장기 전략목표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활동 강화
 - 역내 영향력 확대와 심화를 위해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의 적극적 홍보하에 주변국에 대한 경제교류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파워 확대전략 적극 추진
 - 강군몽을 위한 군사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역내 군사력 지위 향상 적극 도모
- 신형대국관계의 기조하에 미국을 비롯한 역내 강대국과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질서의 재편 노력 강화
 - 종합국력 및 군사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미국의 글로벌 지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역내 G2 구도 확립을 위한 중국 주도의 지역경제협력 활동을 공세적으로 추진
 -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자유무역 수호자로서의 역할 강조를 통해 중국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미국의 역내 리더십 표류 공략 도모
 - 역내 미일동맹의 강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군사훈련을 포함한 중러 간 협력강화 지속적 심화

- 역내 경제 및 안보 관련 다자협력체제의 적극적 주도와 참여를 통한 지위상승 및 영향력 확대 도모 가속화
- 북핵 및 미사일 고도화의 해결 방향에 있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지속적 견지와 더불어 중국의 지정학적 이익 및 전략적 자산론에 근거한 대북 우호관계 유지도 지속

○ 대미 정책

-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수립에 대한 지속적 강조를 바탕으로 지역 질서의 G2 구도 재편노력 강화
 -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수립을 위한 중국의 평화적 부상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의 역내 리더십 확보 노력 지속적 강화
 -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핵심이익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주권존중의 원칙하에 강경 대응
- 미일동맹 강화와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 압박 완화 노력 강화와 더불어 일대일로 구상의 적극적 실천을 통한 역내 미국의 리더십 약화 및 중국의 영향력 강화 도모

○ 대일 정책

- 중국의 평화적 부상 정책기조와 지역질서에 대한 리더십 확보를 위해 일본과의 표면적 안정관계 유지 지속적 추구
- 지역질서에 대한 영향력과 리더십 확보 과정에서 일본과의 역내 세력 경쟁 구도 확대

○ 대러 정책

- 미국의 지역질서 주도권 약화를 위한 중러 협력 구도 강화의 지속적 추진

- 중국의 역내 영향력 및 리더십 강화 추진과정에서 중러 간 내면적 긴장관계 발생 가능성도 상존

○ 대한반도 정책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대한반도 정책 기조의 지속적 유지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쌍중단/쌍궤병행(북한 핵 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훈련의 동시 중단/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 병행추진) 방침의 견지를 통한 중국의 역내 리더십 강화와 미국의 영향력 약화 동시 추구
- 역내 리더십 확보를 위한 대한반도 교류 협력 관계 지속과 더불어 한미동맹체제 및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약화를 위해 한국에 대한 안보적, 경제적 압박 추진 가능성 상존
- 3불 입장(사드 추가배치, 미국의 MD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의 철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

4 일본의 동북아정책

○ 동북아 정책기조

- 미일동맹 강화의 기조하에 ‘적극적 평화주의’의 정책기조와 ‘보통국가화’ 추진 강화
 - ‘적극적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평화헌법 개정노력을 가속화 하여 보통국가화의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세계평화와 역내 안보질서에 대한 역할 확대 추진노력 강화
 -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와 더불어 호주와 인도를 비롯한 지역 국가들과의 안보협력강화를 통해 역내 안보 및 군사적 역할 증대 추진
-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탈퇴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역내 국가와의 경제적 교류 협력을 통한 아베노믹스의 지속적 추진 강화
-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 및 역내 리더십 유지를 위한 중일 간 세력경쟁 구도의 가속화

○ 대미 정책

-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안정적 안보환경 조성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공동 견제 확대
- 불확실성을 활용하는 트럼프 협상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국가와의 적극적 협력 확대와 이를 통한 대중국 포위망의 주도적 추진 가능성 상존
- 안전보장 제공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이익확보 행위가 과도해 질 경우 중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주도

할 가능성도 상존

○ 대중 정책

- 아베노믹스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 협력 확대 노력 강화
- 인도-태평양 개념을 통한 역내 대중국 포위망 형성 적극 추진
- 중국의 군사개혁 및 군사력 강화와 대외적 팽창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 미일동맹 및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적극 협력하는 가운데 미일 및 역내 국가와의 군사훈련 추진 등을 통해 대중 견제 강화
 - 중국의 남/동중국해 군사력 팽창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적 대응 강화와 센카쿠 열도 방어를 위한 방위력 증강 지속 추구
 -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적 보장약속 이행 도모를 통한 대중 압박 강화

○ 대러 정책

- 미래 지향적인 러일관계 구축 및 전략적 협력관계 수립의 기초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교류 활성화와 북방영토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경제 활동 확대 및 강화 재추진
- 신동방정책에 따른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강화 대비를 위한 미일동맹 및 역내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강화
- 러일 간 해양영토문제의 미해결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지역 주변 군사력 배치 증강 가능성 상존

○ 대한반도 정책

-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일 공조관계 강화를 통해 대북압박 및

제재 지속적 강화

-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추구하고 더불어 중국 견제효과 유발 도모
- 중국의 지역질서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한국과의 안보협력 확대 지속 추진

5 러시아의 동북아정책

○ 동북아 정책기조

- 총선 승리와 친위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푸틴이 대선에 당선 될 것이며, 이후 국내 권력기반 강화를 바탕으로 '대외정책개념'에 입각한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공고화를 가속화
-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로 인한 서방과의 관계악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면서, 극동개발을 위한 '신동방정책' 및 아태지역 협력강화 지속 추진
- 미국의 글로벌 MD체제 및 '힘을 통한 평화'의 대응을 위해 '강한 국방 건설'과 무기현대화 계획 추진 강화
- 미국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러시아 스캔들의 여파 극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및 북핵문제해결에 대한 원칙적 입장 견지를 통해 안정적인 미러관계 모색
-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추진과정에서 중북관계의 악화를 틈 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 추구 가능성도 상존

○ 대미 정책

- 미러관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협력의사표명 등 관계개선의 제스처와 더불어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방예산 증액 및 군사력 강화 지속 추진
-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대응을 하기 위해 중러 간 군사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 대중 정책

- 미국의 역내 영향력 지속적 유지와 동맹관계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러 간 교류 협력의 강화 지속 추진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협력 및 상하이 협력조직(SCO),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포럼(ARF),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등 다자협력체제를 통한 중러 협력 확대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 견제

○ 대일 정책

- 서방과의 관계악화와 미러관계 불확실성의 대응을 위한 일본과의 협력 확대 지속적 추진
- 북방영토 공동경제활동을 통한 러일 협력 강화 가능성이 상존하나, 북방 4개도서 반환 불가 입장은 지속 유지

○ 대한민국 정책

-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동의하는 가운데 한국과의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 추진
 - 러, 북한, 한국의 3국 공동 철도, 에너지, 전력 연결 사업에 대한 협력강화 추진
-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있어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사드 배치를 포함한 미국의 역내 MD체제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 지속
- 북핵문제에 따른 대북제재 과정에서 점증하고 있는 북중 간 관계 소원 을 틈 타 북러관계 강화 도모

제3장

북한정세전망

1. 정치

2. 군사

3. 경제

4. 대외·대남

제3장 북한정세전망

1 정치

○ 김정은의 리더십 지속

- 권력 핵심부 장악 지속
 - 국가원로 김영남, 군과 당을 관리하고 있는 황병서와 최룡해, 경제와 국가 운영을 담당하는 박봉주 등을 통한 균형 정치 지속
 - 보안라인 장악 유지, 백두혈통 김여정의 지속 부상
- 세대교체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신엘리트 창출
 - 기존 정치국 구성원의 약 26%, 정무국 소속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의 약 44%(구(舊) 당비서), 전문부서 부장들의 약 39%,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의 약 36%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별 잡음 없이 단행한 2017년 10월 제7기 2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흐름을 지속할 것.
- 업적 정당성 선전과 권위 구축 지속
 - 권력 핵심부에 대한 장악력과 함께 김정은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는 정치적 권위의 구축.
 - 북한은 최근 연이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의 성취와 제재에 '자강력 제일주의'로 맞서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트 맹주국'을 이끄는 '민족의 수호자'로 김정은을 선전하고 있음.

- 핵 문제로 교착되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내면화 시킨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을 민족주의적 정서와 결합시켜 체제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시키려는 동원전략에 유리한 토대 제공
- 따라서 제재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피해를 주며 여론이 전반적으로 반전되기 전까지는 현재 북한의 대중적인 상징 조작 프로그램들이 일정한 효과를 지속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엘리트층의 조직적 이반 가능성 저하

- 엘리트 이반의 중요성
 - 독재체제에 대한 최신의 연구결과들의 공통된 결론은 체제 붕괴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통치 엘리트의 이반이라는 점임.
 - 1946년부터 2008년까지 전 세계 독재체제 중 전복된 303개의 사례 중 엘리트 이반에 의한 전복 사례의 비중이 205건으로 압도적이며 여타의 사례도 엘리트 이반과 결합된 경우였음.
- 기득권 보장을 통한 엘리트층의 안정적 관리 지속
 - 북한의 엘리트는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동심원의 형태로 일원화 되어 있으며 좁게는 당 중앙위원회 230여명, 넓게는 약 300만 명의 평양시민과 4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조선노동당원들(양자는 상당수 중복)로 구성.
 - 최근 북한에서 엘리트 정치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몇몇 상징적인 숙청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엘리트의 재생산과 기득권에 대한 보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 특히 아래로부터의 시장화가 시장에 대한 인정 혹은 방임과 맞물리며 권력과 이권의 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또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진전으로 인해 정권 안보가 강화된 부분은 현 엘리트들에게 현재의 기득권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증폭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집단적인 의미에서 당이라는 권력과 결합된 통치 엘리트들이 현 체제에서 누리는 이권은 증대된 반면 이반을 통한 기득권 구조 자체의 전복은 기회비용이 매우 커진 상황.
- 제7기 2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진 상당 폭의 세대교체는 북한의 엘리트 교체가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 요컨대 엘리트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이반은 적어도 단기간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아래로부터의 저항의 조직화 가능성 정체

- 주지하듯 소련과 동구의 체제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변수 중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불만의 축적과 조직화였음.
- 그러나 현재 북한의 시민사회의 형성 정도는 1980년대의 소련과 동구는 물론이고 1960년대에 비해서도 미약한 수준
- 예를 들어 소련의 정치범은 1970년대 말 1억 명당 26명 꼴로 스탈린 시대의 100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상태였으며 정치적인 서적을 제외하면 외국 서적을 보는데 제한도 없었고 단파라디오를 통해 합법적으로 외국방송을 어디에서든 청취할 수 있었으며 군사시설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행도 자유로웠음.
- 또한 1960년대 이래 소련과 동구 전반에는 반(半)합법적인 형태로 다양한 조직과 결사, 출판물들이 존재했으나 적어도 현재까지 북한에서 이와 같은 조직과 결사가 발견된 사례는 전무함.

- 따라서 비교정치적으로 볼 때 현재 북한 시민사회의 발달 정도는 1940-50년대 스탈린 통치 하의 소련에 가까운 정도로 적어도 단기간 내에 붕괴나 체제 전환의 중요한 변수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적음.

○ 당-국가 체제의 공고화 지속

- 당-국가 체제로의 복원을 통한 정치 제도화 진전
 - 2009년 후계체제의 개시 이후 북한은 당대표자회를 비롯하여 그동안 작동정지되어있던 당의 비상설 집단지도협의체들을 복원시키며 당-국가 체제의 제도적 디자인을 복구하기 시작함.
- 정치 제도화를 통해 수령제의 인격적 지배의 불안정성을 보완
 - 이와 같은 변화는 김정은의 부족한 카리스마와 능력을 보완하는 장치들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평가됨.
 - 36년만에 개최된 2016년 7차 당대회는 해당 흐름의 정점이었음.
 - 해당 대회에서 북한은 수령제의 강화와 함께 폐지되었던 당위원장-부위원장 명칭을 부활시키며 집단지도체제라는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원형을 복원하려는 흐름을 지속.
 - 또한 ‘국방’이라는 특정한 분야의 최고지도기관을 통해 국정전반을 관리하던 선군시대의 비정상성을 탈피하여 국방위원회 명칭을 국무위원회로 개칭하는 동시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 내각총리를 임명함으로써 국가 전반을 관할하는 위상을 분명히 함
 -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집단지도체제의 리더로서의 당 총비서와 국무원 총리가 이원적으로 통치하는 중국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으로 보임.

- 2017년에도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 비상설협의체계를 정상가동하며 당국가체제의 공고화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 중요한 변수

- 상기한 정치적 안정성의 중요한 토대는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여 온 경제상황이었음.
- 따라서 향후 제재의 효과가 현실화 되면서 경제위기가 초래될 경우 정치적 안정성 역시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음.

2 군사

-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기반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지속 추진.
 - 핵 투발 수단으로서 미사일 개발의 완성단계 진입
 - 북한은 2016년 핵탑재 ICBM 개발에 필수적인 대부분의 요소기술을 마무리한 후 2017년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ICBM을 포함한 다양한 중장거리 미사일의 고도화내지 전력화를 위한 비행시험을 단행
 - 지난 2년여의 개발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 실질화는 결정적 진전을 위한 마지막 문턱을 넘어섰다고 평가될 수 있음.
 - 스스로 “국가핵무력완성, 로케트강국 위업의 실현”으로 규정한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는 그 물리적 실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폭발력 향상과 탄두 소형화의 진전
 - 여전히 이견이 있으나 6차 핵실험 폭발력이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를 사용한 결과라면 ICBM급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제작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음.
 - 파키스탄 등과의 기술커넥션과 전문가 평가, 그리고 기존 핵개발 국가의 소형화 달성 기간이 최초 핵실험 이후 2-7년이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북한의 핵 경량화 및 소형화 기술은 완성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 남은 관문인 재진입 기술 확보와 다탄두, 고체추진 ICBM, SLBM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일련의 공개실험, 또는 우회적 도발로서 인공위성 발사 등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 “국가핵무력완성”이라는 북한의 선언은 핵무기 개발을 일단락 짓고 병진노선의 또 다른 축인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상기한 규정을 공식화한 2017년 11월 30일 노동신문 1면 사설을 통해 앞으로도 “주체적국방공업을 천백배로 강화”할 것이며 “국가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할 것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음.
- 이는 “국가핵무력완성”선언이 기술적인 것이라기보다 정치적인 것으로 미국에게 협상의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협상을 통한 제재국면의 돌파가 불가해질 경우 다시 개발 및 실험을 지속할 것이라는 이중적 신호라 할 수 있음.

○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지속 및 분쟁지역화 시도 가능성

- 핵과 미사일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왔으나 북한은 WMD 이 외에도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지속추진해 왔음.
- 재래식 전력의 강화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전면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한 후 향후 협상 카드로 비핵화가 아닌 국지전의 상시화를 통해 한반도를 분쟁지역화하는 전략으로 나올 경우를 대비해야하기 때문
- ‘안정-불안정 딜레마’(Security-Insecurity Dilemma)로 불리는 상기한 상황이 실제 벌어질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측의 피해가 비대칭적으로 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유의하여 북한의 재래식 전력 증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북한의 재래식 전력 증강은 아래와 같이 육군과 해군력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들어 급격히 가속화 되어 왔으며 2018년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농후함.

- 육군 전력의 현대화와 전력화 지속 추진
 - 북한 육군 전력의 현대화는 전차와 장갑차 등 기본 기계화 전력의 개량과 더불어 특히 대공, 대함 역지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올해 초 전력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300mm 방사포는 사거리가 70~80km 였던 기존의 방사포와 달리 사거리를 최대 200km로 늘린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영상추적 장치를 장착하여 정확도 역시 상당부분 개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이와 같은 현대화된 전력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재래식 전력에서의 열세 역시 극복하려 노력을 할 것으로 판단됨.
- 해군 전력의 현대화와 전력화 지속 추진
 - 북한은 이미 2016년에 북극성-1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래급 잠수함(2000t)에 이어 1990년대 초반 구소련에서 고철 명목으로 수입한 골프-II급을 개량 및 모방하여 SLBM 3발을 탑재하는 신형 잠수함 건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2018년에도 해당 작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전략무기의 개발 이외에도 김정은 시대 들어 현대적인 함대함 미사일과 자동화된 함포를 탑재한 신형 고속정, 헬기 탑재 신형 호위함, 공기부양정과 신형 상륙정, 소형 공격 잠수정과 복합유도어뢰 등을 개발하는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전투함에 과도관통형 선박(VSV : Very Slender Vehicle)과 수면효과선(SES : Surface Effect Ship) 기술을 적용하는 등 일련의 재래식 전력 현대화를 지속해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국가핵무력완성이라는 선언은 상기한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대한 북한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음.

3 경제

○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변화 지속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 2013년 이래 북한은 일련의 경제개혁 내용을 담은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2016년 7차 당대회를 통해 재확인됨.
 - 해당 조치들의 핵심은 국가에 바치는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협동농장, 국영기업 등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체 분배를 허용하는 것임.
- 비록 심도와 범위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없는 상황이나 탈북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된 바에 의하면 비록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상기한 변화의 흐름은 2017년에도 지속 추진 되어온 것으로 파악됨.
- 현재 북한의 개혁 수위는 1980년대 초중반, 즉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2018년에도 이와 같은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군수경제에서 민수경제로 자원배분 우선순위의 변화 가능성 확대

- 북한의 전통적인 중공업우선 노선은 탈냉전과 함께 ‘혁명적 경제전략’을 통해 한 차례 전환이 시도되었으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국방공업 중심의 전략부문에 대한 우선 투자를 핵심으로 하는 ‘선군경제노선’으로 회귀.
- 경제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은 핵 억지력에 기반하여 상기한 선군경제노선의 자원배분 우선순위를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내포.

- 리영호 숙청과 병행된 군의 경제관리 이권을 내각으로 이전시키는 조치들은 상기한 선군경제노선이 초래한 또 하나의 흐름인 ‘군의 경제화’를 역진시키려는 실질적 조치의 일환으로 파악됨.
- 이러한 측면에서 2016년 7차 당대회를 통해 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내각 총리 박봉주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및 정무위원회에 진출한 점이나 이번 10월 제7기 2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직후인 10월 8일 김정일 총비서 추대 중앙경축대회를 통해 총정치국장 황병서보다 앞선 서열로 발표된 것은 이와 같은 자원배분 우선순위의 변화와 관련한 함의가 적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상당기간 북한 경제에서 이와 같은 시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시장을 통한 비공식경제에 대한 방임정책 지속

- 시장에 대한 억압과 방임이 번갈아 반복되며 정책상 혼란을 보인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 시대에는 일관되게 방임정책을 펼치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의 시장은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여왔음
 - 예컨대 위성사진을 통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 수는 2017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2015년의 396개에서 40개가 더 늘어난 436개로 확인됨.
- 상기한 시장의 확산은 ‘생계형 기업가’를 넘어서 개인수준에서 자본축적도를 높인 ‘사업형 기업가’의 출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돈주”라고 불리는 이들은 서비스업뿐만이 아니라 농업, 수산업, 광업, 무역업, 건설업, 제조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가고 있음.

○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경제의 침체와 변화 정체 가능성

-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실시되고 있는 현 국면은 상기한 북한 경제의 회복세에 중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경제제재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합리화, 자원배분 우선순위의 조정, 시장에 대한 방임 등 기존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와 관련된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큼.
 -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간 동안 북한이 1999년 이후 최고의 성장률인 3.9%(전년대비 실질 GDP 증가율)를 기록했다는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나타나듯 이와 같은 변화의 시도는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2016년 안보리 제재 결의안 2270호를 기점으로 대북제재는 그전의 제재를 넘어서는 질적 전환이 이루어짐.
 -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21, 2371, 2375호의 특성은 광물 및 수산물, 석유, 노동자 송출 등 WMD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북한경제 일반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
 - 해당 조치로 인해 북한 경제 전반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북한의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현재의 속도로 외화가 고갈될 경우 북한은 계획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전략부문에 민간 외화의 투자를 허용하거나 강압적 방식으로 민간 외화를 흡수하는 방식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나 전자는 사회주의 경제의 틀 자체를 침식할 가능성이 있어 후자의 가능성이 높은 바 이럴 경우 시장이 위축되고 일련의 변화의 흐름들 역시 후퇴할 가능성이 큼.

4 대외·대남

○ 핵개발을 향한 My Way 전략으로부터의 전환의 압력 증대

- 관계개선이 아닌 자체의 핵개발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균형 전략은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인내,’ 그리고 중국의 정책 전환 등과 결합되며 대미, 대남, 대중 관계의 악화 즉 외교가 부차화 되는 결과로 이어짐.
- 고립을 감수하는 균형전략은 역설적으로 그 성공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며 이는 북한의 정책전환의 계기가 될 것.
 - 현재까지의 균형전략은 해당 전략이 초래한 기회비용인 ‘고립’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수 있었음.
 - 그러나 문제는 균형, 즉 안보의 확보는 그 자체로 최종 목적일 수 없으며 강성국가,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상징되는 발전과 변영이라는 최종 목표는 결코 ‘고립’과 양립될 수 없다는 점.
 - 특히 최근 대북제재의 강화와 실질화로 인해 북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향후 정책 전환의 중대한 변수가 될 것.

○ 제재 상황을 돌파하려는 현상타파의 시도 가능성 증대

- 현재 북한의 목표는 첫째, 비핵화 문제를 최대한 문제 해결의 출구 쪽으로 밀어 놓는 대신 평화협정과 경제제재의 해제 등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입구전략으로 관철하되(선평화 후비핵화론), 둘째, 이와 같은 과정이 경제제재의 효과가 현실화되기 전 최단시간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은 현재의 상황이 지금까지와 달리 점차 시간싸움에서 자신들이 불리한 ‘손실의 영역’(domain of losses)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큼.
 - 특히 2018년은 공화국 창건 70주년으로 기념일인 9월 9일 이전까지 성과를 필요로 한다는 점 역시 주요한 변수임.
- 상기한 판단은 제재국면을 돌파하려는 ‘현상타파’의 시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상황에 따라 대화의 모멘텀을 탐색하는 것과 도발을 현격히 강화하는 전혀 상반된 두 개의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 첫 번째 가능성의 현실화는 북한의 지속적인 주장인 ‘조선반도 비핵화’론의 긍정적인 측면 즉 북한 역시 궁극적인 목표로서 한반도 비핵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밝히고 있는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 정책의 철회’와 관련한 논의를 북한 비핵화과정과 결합시킴으로써 미국과 한국의 ‘선비핵화 후평화’ 주장과 북한의 ‘선평화 후비핵화’ 주장 간의 접점을 찾아낼 수 있으나 여부에 달리게 될 것임.
- 상기한 첫 번째 경로가 막힐 경우 북한은 두 번째 경로인 도발을 현격히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인공위성 발사, ICBM 개량 및 추가실험 또는 실전배치와 SLBM 지속 개발 등 핵능력 고도화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른바 Security-Insecurity Dilemma를 활용하여 국지도발 등을 상시화함으로써 한반도를 분쟁지역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 전자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대남정책의 차원에서도 일련의 유화 조치와 함께 관계개선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나 후자의 시나리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대남트랙은 존재감이 미미해질 가능성이 농후함.

제4장

국내정세전망

1. 정치

2. 군사

3. 경제

제4장 국내정세전망

1 정치

- 국민들의 각 분야 개혁에 대한 관심 고조 예상
 - 지난 정부 탄핵정국 재판 종결과 새로운 정부 취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정책들의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국민 여론 증가 예상
 - 내각 구성 완료 등 새 정부의 안착으로 정책 추진력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 창출, 등록금 인하 및 동결, 부동산 대책 등 여러 분야에서 개혁 정책 추진 예상
- 2017년 조기 대선으로 복잡해진 정치 구조의 이합집산 가속화
 - 보수진영의 통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보수 단일화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2018년 6월13일 제7회 지방선거를 위한 정개개편 실시 가능
 - 2017년 대선 당시 4당 체제로 유지된 정당 구도가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정당구도로 변화 예상
-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립 구도 심화
 - “적폐청산”이라는 기조 하에 현 정부는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처벌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보수진영은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대항할 것으로 예상

- 양 진영이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북정책 및 안보문제가 양 진영 최대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 높음
-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로 다양한 정치적 이슈 등장
- 전통적으로 정치 참여가 낮았던 20~30대들이 SNS 및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활발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
 - 청와대의 국민 소통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 등이 점차 국민에게 알려져 가장 활발한 여론의 장 중 하나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
 - 양심적 병역 거부, 동성혼 등 소수의 문제로 치부되었던 이슈들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정책 방향을 요구하는 주장 제기

2 군사

○ 본격적인 국방개혁 작업 착수

- 국방부의 문민화 추진을 위해 현역을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실질적인 인사 배치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
 - 지난 정부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인 장군 정원 감축, 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 민감한 국방현안에 대한 개혁 작업 착수
 - 그러나,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군 내·외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부대구조 개편, 병영문화 혁신 등 세부적인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방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로 인한 한미관계 갈등 표출 가능

-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보호해주는 국가들은 돈을 더 내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주장으로 인해 분담금 인상 요구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여론 관심이 급상승하여 이 문제를 국가의 자주권과 결부되는 현상 발생 가능
- 또한, 미국 측 요구에 대한 진보 진영의 반대 시위 및 남남 갈등 발생 가능

○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남북, 북미 관계 경색 지속

- 미국의 행동에 대해 북한이 강대강 대결구도를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강화하고 대북 군사적 옴

선 사용 가능성을 계속 제기

-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대 한반도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이며 한-미 관계 강화는 물론 한-미-일 관계 강화 노력 요구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 증가

- 핵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보이며 이를 타개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지도발 실행 가능성 높음
- 국지도발의 경우 전통적으로 많이 도발했던 지역인 DMZ 또는 서해상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음
- 이와 함께 비대칭 능력을 사용한 위협 가능성도 증가할 것임. 특히, 도발 주체와 원점 확인이 매우 어려운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사 능력 극대화 지속 추진

- 신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속한 전작권 전환 대비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군사 능력 강화가 추진될 것이며 3축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예상
- 또한,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군사 정찰자산 등과 같은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구비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

○ 국방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노력

- 전작권 전환과 자주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의 증가 기조 유지
- 국방예산 증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발생할 것이며 보수 진영이 정부의 국방비 증가에 찬성하고 현 정부의 지지 기반인 진보 진영이 반대하는 상황 발생 가능

3 경제

-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향상으로 소비심리 자극
 - 최저임금 인상, 고용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의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
 - 성공적인 평창 올림픽 개최로 인해 내수 시장 회복세 및 국내 주식 시장 상승 기조 유지 전망
- 대중 수출 호조로 경제 성장 호조
 - 2017 10월 31일 “한중 쌍방은 각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조속히 정상화 시켜 발전궤도로 돌려놓는데 동의했다”는 발표 이후 한중 인적, 물적 경제 교류 활성화 예상
 - 중국 내 한류 열풍이 재 확산되어 다양한 문화 산업은 물론 관광 산업 확장세가 뚜렷하게 상승될 것으로 예상
- 무역수지 감소가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
 - 수출의 경우 세계 경제의 회복세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의 경우도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인해 증가 될 전망
 - 수출입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수입이 더 상승하여 무역수지는 감소 예상
- 한미 FTA 재협상 및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인한 대미 수출량 감소
 - 한미 FTA의 경우 완전 폐기보다는 재협상을 통한 개정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현재 미국 측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상당한 타격 예상

-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 가드 발동 등도 한국 주요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한 고강도 부동산정책 지속 추진

- 2017년 6·19, 8·2, 9·5, 10·24까지 이어지는 세 번의 부동산 정책과 한 번의 가계부채대책 발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
- 2018년에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 발표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

제5장

안보정세종합평가

1. 세계정세

2. 동북아정세

3. 북한정세

4. 국내정세

제5장 안보정세종합전망

1 세계정세

○ 기회요인

-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범지구적 리더십 약화 그리고 이로 인한 국제 다자기구의 역량 약화에 대해 한국의 적극적인 중견국 외교로 대응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위상 증진 기회 마련 가능
- 미국의 최근 국방비 증가는 미국의 군사력 증강 및 군사력 현시를 위한 가용자원의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북한 한미 연합 억제력 증진 기회로 활용 가능
- 특히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는 한국의 핵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기회의 창 제공
-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에 대한 나토의 공약은 한국으로 하여금 북핵 억제 태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도전요인

- 범지구적 차원의 무역 및 금융,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은 한국의 입장을 둘러싼 딜레마 가중
- 미국의 역내 리더십 약화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의 리더십 확립 노력의 동시 전개로 한국이 중국 주도의 정치·경제 다자기구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압박 가속
- 한·미·일 안보협력의 공고화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 측구에 대한 미국의 압력 가중

- 2018년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북 정책에 큰 변화 가능
- 중동 내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양극적 구도 가시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반이란 연대의 형성으로 인해 향후 중동 지역의 불안 가중 전망
- 가중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대한 합의점 도출이 지연되는 가운데 개별 국가의 사이버 억제 태세에 대한 도전가속화
- 선진국에서의 ‘소프트 타겟 테러 (soft target terror)’ 그리고 ‘로우 테크 (low tech)’ 증가 현상이 한국에서도 발생 가능
-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위력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 증가

2 동북아정세

○ 기회요인

- 초불확실성의 강화에 따른 지역안보협력 메커니즘 수립의 요구 증대와 이에 따른 역내 안정적 다자안보협력체계 수립의 모멘텀 발생 가능성 증대
- 초불확실성의 강화에 따른 역내 다자주의 질서수립 요구 증대시 한국의 중견국 역할확대를 통한 역내 역할 및 지위 상승 가능성 증대
-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 추진과 북핵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표명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협력 강화
- 중국의 자유무역 수호자 역할 강조에 따른 역내 경제활성화 기대감 고조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대북 공조체제 강화

○ 도전요인

-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한반도 및 지역안보질서의 불안정성 증대
- 역내 초불확실성의 확대와 지역안보질서의 재편과정으로 인해 한반도 및 지역안보질서 불안정성 증대
- 미중 간 대립구도 심화에 따른 지역안보질서의 불안정성 증대와 더불어 한국의 선택에 대한 압력 가중으로 한미와 한중 간 갈등 발생 가능성 상존
- 미국의 국익우선 전략으로 인해 한미동맹 분담금 및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압력 가중

- 중국의 군사개혁 및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따른 방위력 증강 추진으로 인한 역내 군비경쟁의 고조

○ 대미정책

- 한미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수행역할 강조를 통해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
- 북핵 및 미사일 개발완료에 대비한 양국 간 공동인식 확대와 협력강화 및 구체적 대응전략 마련 추진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및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관계 정립과 국익확보 적극 추진

○ 대중정책

-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상호 마찰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국익에 근거한 명확한 입장과 태도 표명 추진
- 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 확대와 한중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대화 강화 추진
- 한중 경제교류관계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안보적 문제로 인한 양국 국민 간 정서적 갈등 방지 노력 추진

○ 대일정책

- 대북 대응태세 확립에 대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효율성 증대 추진
- 역내 초불확실성 강화에 따른 한국의 증견국 역할 확대 모멘텀 조성을 위한 기반조건 형성 차원에서 한일 간 우호협력 강화
-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관여 가능성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대리정책

- 한국-EAEU 간 FTA 체결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 확대 추진
- 러시아와 남북한 공동철도, 에너지, 전력 연결 사업과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개발 참여 통한 경제적 협력 확대 추진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러 협력 강화 추진

3 북한정세

○ 기획요인

- 제재의 강력한 효율성(efficiency)
 - 안보리 제재 결의안 2321, 2371, 2375호의 특성은 광물 및 수산물, 섬유, 노동자 송출 등 WMD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북한경제 일 반으로까지 확장되었다는 점
 - 해당 조치로 인해 북한 경제 전반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 단되며 특히 북한의 외환보유고는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볼 때 2018년 하반기 부터는 제재의 효과가 가시화 될 가능 성이 농후함
- 북한의 손실영역으로의 진입
 - 핵개발에 올인하던 지금까지의 상황과 달리 현재의 상황은 핵개발 ‘너머’의 목표, 즉 발전과 번영을 위한 자본이 필요한 상황
 - 따라서 이전과 달리 북한이 제재와 봉쇄라는 현 상황을 감내하며 버 티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임
 - 특히金正은 시대 이후 엘리트와 권력의 결합의 핵심이 이데올로기 적인 것에서 경제적 특혜로 급격히 이동했다는 점에서 제재의 충격 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정치적 안정성 역시 제재 국면이 장기화 될 경우 침식되어갈 가능성 농후
- 제재 국면을 벗어나려는 현상타과 전략 채택 가능성 증대
 - 손실의 영역으로의 진입이 본격화될 경우 북한은 적극적으로 현 제 재상황을 벗어나려 시도할 것임

- 제재상황을 벗어나는 저비용의 트랙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봉쇄를 해제하는 것이므로 당분간 상황을 관망하며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 큼
-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화성-15>형 발사는 기술적인 것이라기보다 정치적인 것으로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음

○ 도전요인

- 강력한 제재 국면 속에 북한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을 예상되며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개혁과 자원배분 우선순위의 조정, 시장의 성장 역시 중단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손실영역으로의 진입이 갖는 이중성과 도발의 가능성 증대
 - 손실영역으로의 진입과 현상타파의 압력 증대는 협상을 유도하는 압력인 동시에 그러한 경로가 막힐 경우의 두 번째 옵션인 도발에 대한 유인 역시 증대시킬 것임
 - 손실영역에서의 도발은 지난 기간의 도발보다도 더욱 직접적인 형태로 더욱 빠른 주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함
 - 가장 우려되는 도발 방식은 국지분쟁의 상시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직접 타격하려 하는 경우임
- <화성-15>형 발사를 통한 국가핵무력완성 선언의 위험성
 - “국가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에 대한 강조와 병행된 “국가핵무력완성” 선언은 미국에게 협상의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협상을 통한 제재국면의 돌파가 불가해질 경우 다시 개발 및 실험을 지속할 것이라는 신호라 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주체적국방공업”에 대한 강조는 국지도발에 활용될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국내정세

○ 기회요인

-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민 의식 결집 가능성 높음
 - 올림픽 개최는 이념, 지역, 세대 간으로 나누어진 인식의 균열을 좁힐 수 있는 계기로 작용
 - 또한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발전상을 표출함으로써 내부적인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기회
-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적/사법적 처리 절차의 마무리로 인해 정치적 대결 구도 다소 약화
 - 새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가속화
 -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 정책적 현안에 대한 건설적 정치 대결 구도 등장 예상
- 새로운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자체 장들의 지방 발전을 위한 의욕 상승
- 싸드 배치에 대한 제재의 완전한 해결로 한중교류의 전면적 확대
 - 활발한 한중간 인적교류는 중국의 親韓化에 유리하게 작용
 - 중국과의 경제교역의 정상화는 한국의 수출 호조를 견인하여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 전작권 조기 환수와 자주적 역량 강화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상승하여 군사력 건설에 대한 추동력 강화

○ 도전요인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과열 양상으로 국민 여론 분열될 가능성
 - 보수-진보, 영-호남, 세대 간 대결구도 재등장 가능성
 - 각종 유언비어 및 루머를 바탕으로 한 비방전 발생 가능
-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부 갈등 가능성
 - 개혁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들(민-군, 병종간)간 의견 대립 심화
 -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계획된 군사력 건설에 차질 발생 가능
- 한-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균열로 인해 동맹 약화
 - 2018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한-미간의 정책 이견이 동맹에 부정적으로 작용 가능
 - 전작권 전환 준비과정에서 새로운 지휘 체계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의견 대립 심화
 - 한미간의 정책 조율 시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대두될 수 있으며 이것이 동맹 관계에 악영향으로 작용 가능
- 북한의 핵개발 의지 지속으로 인한 한반도 군사적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
-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화 가능성

제6장

결론 및 대비방향

1. 대외정책

2. 대북정책

3. 국내정책

제6장 결론 및 대비방향

1 대외정책

<세계적 차원>

○ 정치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범지구적 리더십 약화로 발생한 공백에 대해 적극적인 국제 및 지역 기구 참여 및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위상 강화
- 2018년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결과 시나리오에 따른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동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대책 강구 필요
- 중국의 범세계적 그리고 지역적 리더십 강화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공유된 국가이익 영역을 식별하여 상호 호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 외교 추진 필요
- 중동 내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양극적 구도 가시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반이란 연대의 형성으로 인한 중동 내 불안정성 증가에 대비하여 원유수급 다변화 대책 등 점검 필요

○ 군사

- 미국의 최근 국방비 증가의 부문별 분석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고를 위한 군사력 증강과 전략자산 순환 배치 증대를 위한 한미 간 협

상에 활용

-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 및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담기게 될 미국의 핵정책 변화 그리고 미국의 최근 핵전력 현대화 추세를 대북한 핵확장억제력 강화에 활용
-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인도·일본·호주·한국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시도하는 미국의 요구에 대비하여 한국의 참여 원칙과 범위를 사전 결정 및 대응
- 한국은 나토와의 협력(특히 프랑스)을 통해 북핵 억제 태세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의 중대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 환기 전략 수립 및 추진
- 전임 정부 임기 중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 논쟁 등으로 인해 사이버 억제 태세의 강화 노력이 담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법적 감독체제 하 범정부적 사이버 대응 능력 강화

○ 경제

- 한국은 한미 FTA 재협상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미국의 추가적인 통상 압력을 차단하는 전략 구사 필요
- 한국은 향후 아시아 역내 경제적 주도권을 놓고 경쟁중인 중국 주도의 RCEP, 일본 주도의 CPTTP 발전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의 참여 전략 수립

○ 사회문화

- 유럽 내 극우주의 발현 양상을 분석하여 EU 내 보호무역기조, 기후변화 정책, 이민자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 대응
-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소프트 타깃 테러 (soft target terror)’ 그리

고 ‘로우 테크 (low tech)’에 대한 한국의 범정부적 대비태세 재정비

- 후기 진실 정치의 가속화에 따른 국론 분열, 중요 국가 정책의 집행 차질 등에 대비하여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대중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유통 체계와 전략적 의사소통 체계 정비
-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위력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비한 범정부적 재난 대비 대체 점검 및 보완. 또한,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지원체제 정비

<동북아 차원>

○ 대미정책

- 한미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수행역할 강조를 통해 미국의 국익 우선주의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
- 북핵 및 미사일 개발완료에 대비한 양국 간 공동인식 확대와 협력강화 및 구체적 대응전략 마련 추진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및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관계 정립과 국익확보 적극 추진

○ 대중정책

-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상호 마찰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국익에 근거한 명확한 입장과 태도 표명 추진
-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 확대를 위해 한중 양자 간 전략대화 및 한미중, 한중일, 한중러 등 소다자 전략대화 적극 추진

- 한중 경제교류관계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과 안보적 문제로 인한 양국 국민 간 정서적 갈등 방지 노력 강화

○ 대일정책

- 대북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한미일 소다자협의체 구성을 통해 3국 간 안보협력의 효율성 증대 추진
- 역내 초불확실성 강화에 따른 한국의 중견국 역할 확대 모멘텀 조성 차원에서 한일 간 우호협력 강화
-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관여 가능성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대러정책

- 한국-EAEU 간 FTA 체결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 확대 추진
- 남북러 공동철도, 에너지, 전력 연결 사업과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개발 참여를 위한 한러 경제 협력 확대 추진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러 협력 강화 추진

2 대북정책

○ 협상을 통한 제재 정국 돌파 시도에 대한 대응 필요

- 조선반도 비핵화론을 역이용한 입구로의 견인 시도
 - 핵무력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북한의 최근 선언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정책옵션에서 제외했다고 해석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며 북한은 9.19 공동성명 1항의 6자 회담의 목표는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라는 규정으로 반영시켰던 ‘조선반도 비핵화’론을 지속하고 있음
 - 이는 핵을 협상탁에 올리는 조건 즉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의 근본적 제거라는 문구에 반영되어 있음
 - 조선반도 비핵화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출구로서의 비핵화론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회로 활용할 여지가 있음
- <선평화 후비핵화론>과 <선비핵화 후평화론>과의 점점 탐색
 - 조선반도 비핵화의 입구와 해결 방식과 관련한 북한의 현 입장은 ‘선평화 후비핵화’론
 - ‘선평화 후비핵화’에서 평화를 이루는 두 가지 조건은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의 근본적 제거이며 각각은 ‘평화협정 체결’과 ‘핵우산 제거’로 구체화되어 있음
 - 우리의 명확한 입장은 선비핵화 후평화론이지만 선후차가 아닌 내용 자체로만 보면 평화와 비핵화의 구성요소들은 이미 9.19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측도 일정부분 수용한 바 있음
 - 따라서 비핵화, 평화 모두 특정한 ‘사건’(event)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의 연속으로 구성된 ‘과정’(process)이라는 측면을 활용하여 양

주장간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 필요

- 현재 입구전략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이슈는 한미군사연습과 핵, 미사일 개발 동결인 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계기를 활용하여 해당 옵션을 단력적으로 검토할 필요
- 최근 악화된 북중관계로 인해 외교적 돌파구를 러시아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러시아와의 외교적 협력관계 구축에도 지속적인 노력 요

○ 도발을 통한 제재 정국 돌파 시도에 대한 대응

- 협상의 모멘텀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전개될 급격한 도발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3축 체제로 대표되는 핵 '사용'에 대비한 전략을 넘어 북한의 실질적 핵 '보유'가 가져올 영향을 포괄하는 핵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
- 단기적으로는 평화공세에 이은 인공위성 발사 등 변형된 도발을 통해 한미 측의 협상 의지를 시험하려 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
- 일정기간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후 도발은 자체적인 실험과 개발을 통한 지금까지의 간접적인 도발의 형태를 넘어선 직접적인 도발의 형태가 될 가능성 농후
- 육상, 해상, 도서지역, 사이버전 등 가능한 모든 도발 경로를 발굴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설 필요
-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발적인 전면전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통제해야함
- 특히 2018년 9월로 예정된 공화국 창건 70주년 행사, 11월로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중하반기에 도발이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3 국내정책

- 국력 결집을 위한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노력 강화
 -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국가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가장 좋은 기회
 -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제 분야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요하게 작용 가능
- 대국민 안보의식 강화 노력 필요
 - 대북 억제력 확보 및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전력 강화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고 이는 대국민 공감대 형성 요구
 - 따라서 국방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강화 될 필요성 증가
 - 현재 국방부에 대한 저조한 신뢰도는 개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가능
 - 따라서 충분하고도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 한국군의 강한 군사력 건설 노력 경주
 - 한반도 전구에서 주도적으로 대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에 매진
 - 특히,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대미 의존성이 가장 높은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강화
 - 물리적 능력과 함께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작전계획 수립 및 지휘 능력을 동시 배양

-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주변국들과 대북 정책 협조 체계 구축
 - 미국과 긴밀한 외교, 군사적 채널을 구축하여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
 -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위해 대북 제재 및 압박 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 설득
 - 일본의 과잉 대응 및 군사 대국화에 대한 우려 표명 필요
- 개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요인 제고 노력 필요
 - 밀어붙이기식 개혁보다는 합리적인 개혁 방향 설정 후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실시
 - 지속적인 군 내외부 설득작업을 병행하여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 지속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 경주
 - 다각적인 출산 장려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
 - 육아수당, 육아 휴직 확대 등 광범위한 육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출산을 적극 장려
 - 출산율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인식 확산 노력 필요



2018년 안보정세전망

2017년 12월 20일 인쇄

2017년 12월 20일 발행

저 자 안경모, 이병구, 하도형, 박민형

편집 · 발행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Tel. 041-831-6412

홈 페이지 <http://www.kndu.ac.kr/rinsa>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ISSN 2586-3673

〈비매품〉